지방시대 매거진

Vol 120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GOVERNORS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Vol
120

2024. 08

지방시대 매거진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독도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2025 APEC 정상 경주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경상북도 경 주 시

지방시대 매거진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지방시대 매거진은 협의회 홈페이지(www.gaok.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4년 8월 10일(제120호)
발 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 소 03186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문 의 02-2170-6092
편 집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홍보미디어부

지방시대 매거진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Vol. 120
2024. 08.

CONTENTS

시도지사 칼럼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지방시대

2024년 역점과제
▸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
▸ 저출생 해결책은 국가 구조 틀 변화
▸ 경북도 저출생 극복의 테스트베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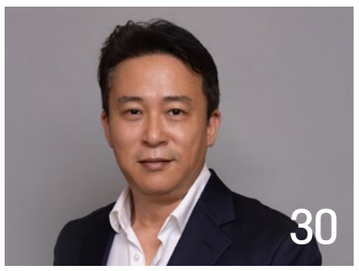
경북의 주요정보
▸ 구미 라면축제
▸ 문경돌리네습지
▸ 포항국제불빛축제
▸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과 왜관철교

경상북도 우수사례
▸ 따뜻한 동행도시 구미
▸ 모든 승객 공짜, 전국 최초 청송 무료버스

의회소식
▸ 제12대 후반기 의장단 호국원 참배
▸ 제12대 후반기 출범식
▸ 제79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 2025 최대 국제행사(APEC) 경주 유치 일냈다!
▸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독도바다 정화활동으로 유종의 미 장식!

글로컬 이노베이터를 찾아서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조남준 박사편

정책포커스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성과와 과제
▸ 정부의 의료 개혁과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



시도지사 칼럼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지방시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시도지사 칼럼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지방시대

대한민국 시대화두로 '지방화'가 던져졌고 지방정부로 권한이양과 4대 특구(교육발전 · 기회발전 · 도심융합 · 문화)가 지정되어져 지역주도 성장의 기반이 마련되어가고 있다

지방시대는 진정한 지방자치로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시대이다. 지역소멸, 저출생 문제 등을 중앙주도가 아닌 지방주도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기초시군구를 행정구역으로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개 광역시도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도로 형태도 다양하고 인구수 또한 13백만 명의 경기와 38만 명의 세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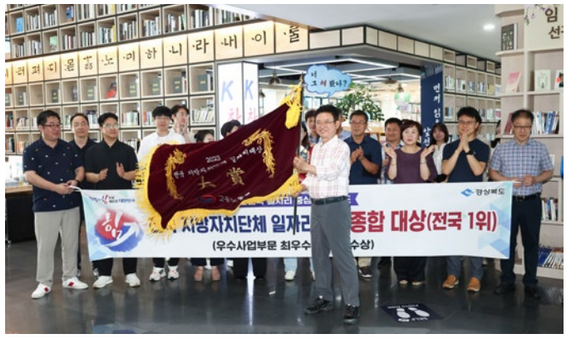
교통 · 통신의 발달로 주민들의 생활권은 확대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지방정부(광역 · 기초)는 차이점을 가지며 그에 따른 행 · 재정적 특례를 요구하며 분화되고 있다.

70~8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인구오너스 효과를 톡톡히 본 대한민국은 시도의 분할에 따른 도시지역 성장을 가속화 시키며 성장했다. 그러나 2020년 총인구수 5,183.6만 명을 기점으로 감소하며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경제성장을 물려줄 다음 세대가 사라질 위기에 이르러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에 이르렀다.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지방거점 구축

1981년 도시행정의 특수성을 대처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대구직할시로 승격시켜 경상북도로부터 분리하였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1995년 대구광역시로 개칭하였다.

대구경북이 분리된 이후 대구경북은 인구증가가 정체되고 지역경제력은 지속적 하락해 대구경북 GRDP 전국 비중이 1985년 11.8%에서 2020년 8.4%로 10%이하로 떨어졌다. 이러한 문제를 타계하기 위해 2001년엔 대구경북통합준비위원회를 2006년엔 대구경북경제통합포럼, 2014년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를 만들었지만 행정구역과 체계가 변화되지 않는 한 역부족이었다.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대응한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가져야만 한다. 진정한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권 뿐만 아니라 입법권과 사법권 모두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하는 것이다. 행정권으로서 자치권의 예로는 자치조직권과 자치계획권을 들 수 있다.

조직운영의 가장 기본인 자치조직권은 현행 대통령령으로 지방정부 조직에 관한 실국본부의 수와 직급 기준, 기준인건비 등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시도지사의 조직 인사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감시 견제하는 시도의회의 권한까지도 제한하고 있다.

지역주도 성장의 기반은 자치계획권이다. 경북도는 국토 및 지역개발 · 교육 등 14개 분양에 122개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 부분은 상위(국가)계획 범위 안에서만 자치계획수립권을 허용하여 매우 제한적이며 국가계획 또한 중앙공무원 중심 및 행정 편의적 위원회 운영으로 지역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한 채 형식적인 계획이 되고 있다. 공간, 산업, 문화, 관광, 주거, 교육 등을 포함한 지방주도의 통합발전 계획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수립되고 있는 법정계획을 지방정부의 임의규정으로 전환하고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른 계획으로 변경해야 한다.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

대다수의 선진국은 인구감소 추세 속에 있음에도 글로벌 도시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세계 주요 40개 도시권은 세계경제활동의 66%, 기술혁신의 90%를 차지하며 4차 산업시대에도 세계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단지 서울(경기)만 세계 주요 도시권에 이름을 올렸다. 하나 된 대구경북은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로 부상하며 온전한 자치권 속에 글로벌 도시로 성장코자 한다. 산과 강 등으로 구분되어 내려온 천 년간의 행정체제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 이미 교통과 통신 등이 발달하여 전 국토가 반나절권이며 국민들의 생활권이 세계적이다. 대구경북의 통합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내 더 많은 글로벌 도시들이 탄생하길 기대한다.

2024년 역점과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
저출생 해결책은 국가 구조 틀 변화
경북도 저출생 극복의 테스트베드

저출생으로 나라 존립이 위기다. 지난 6월, 대통령도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할 지경이다. 핵 전쟁보다 위협적인 수준이다. 사회가 유지되려면 연간 70만명이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데, 한해 태어나는 아이는 20만명 남짓이다. 해마다 50만명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그 어떤 전쟁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진 않는다.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

경상북도는 올 초, 가장 먼저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했다. 경북이 선두 주자로 나선 상황에 대해 당시만 하더라도, 의외라는 반응이었다 사회 전반에 퍼진 회의와 좌절감이 심각했다. 여기에는 수백조원을 써가며 대응에 나선 정부까지 실패한 게 컸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절박함에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조차 없을 거라 여겼기에 전쟁에 나서게 된 것이다.

올 초 직원과의 끝장토론을 시작으로 곧바로 T/F를 가동해, 비상 체제로 전환했다. 도청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매주 도지사 주재 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도의회의 도움으로, 사상 첫 '포괄사업비'를 포함한 1,100억원의 추경 예산이 빠르게 마련됐다. 3월부터는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저출생 극복에 필요한 정책 반영과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정부와의 소통을 이어갔다. 유례없는 속도전을 펼쳤다.

마침내, 5월 저출생 전주기 대응을 담은 필승 실행계획과 100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만남부터, 출산, 돌봄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경북이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담긴 계획이다. 7월 1일에는 전국 최초로 국 단위의 저출생과 전쟁본부를 출범해, 전면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절박함으로 임해온 경북도의 노력은, 마침내 분위기 전환을 끌어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범정부차원의 총력 대응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 지자체 대표로 참석했다. 특히 발표된 정부 대책에 그동안 경북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상당수 반영됐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융합돌봄특구'는 물론, 규제 개선, 법률 개정 등을 통한 저출생 추세 반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언론의 인식 전환 캠페인 전개와 기업, 시도민의 1만원 성금 기부(060-700-1988) 등 자발적 동참이 줄을 잇고 있다. 경북도에서 시작한 저출생과 전쟁은 이제, 나라 전체로 확산됐다. 한 번 해보자는 기대들로 점점 바뀌고 있다.

저출생 해결책은 국가 구조 틀 변화

경북도는 저출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가 구조 틀의 변화라 강조한다. 특히 수도권 집중화에 주목하고 있다. 전 국토의 10% 남짓에 인구 절반이 몰리는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임에도, 매년 10만명의 지방 청년들이 취직과 학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은 점점 치쳐가게 되고, 결국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이다. 이러한'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태어난 곳에서 취직하고 결혼하는'정주민 사회'로 나가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잘 살 수 있는 '교육 개혁'도 필요하다. 대학 진학만을 강요하는 제도가 문제다. 성공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그로 인해 사회 진출과 결혼만 늦어진다. 지난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남녀 초혼연령이 30대가 넘는다. 꼭 필요한 교육을 받고, 빠르게 취업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는 정부가 나서서 오랜 시간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지켜보고 있을 수 만은 없다. 경북도는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풀기 위해 직접 나서고 있다. 경북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디자인하면서, 만남, 출산, 돌봄, 주거, 일생활균형, 양성평등 등 저출생 전주기 담은 전략으로 차별화 한 100대 실행과제를 추진중이다.

그 중에도 대표적인 정책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우선 만남이다. 20~30대 청년 절반이 결혼을 못했다. 도가 직접 결혼정보회사로 나섰다. 청춘동아리, 솔로마을로 만남 기회를 제공한다. 직접해보니 현장 열기는 뜨거웠다. 1기 결과 50명(25쌍) 중 무려 11쌍이 커플로 맺어졌다. 이들은 12월 크루즈여행도 보내준다. 또한 청년 · 신혼부부의 집 걱정을 덜어준다. 총 3천가구에 전월세 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21세기형 온마을이 함께 돌보는 공동체 돌봄을 직접 디자인 했다. 'K-보듬'의 브랜드명으로 아파트 1층에서 돌봄공동체가 24시까지 함께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본다. 5개 시군, 42개소에 시범운영 후, 도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경북도 저출생 극복의 테스트베드

저출생은 정부가 수백조를 쓰며 해결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최근 정부는 정책 실기, 백화점식 대응 등 그동안의 실수를 인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국회 차원의 해결 의지와 각오도 알 수 있었다. 이제, 지방이 현장에 맞게 정책을 디자인하고, 정부는 필요한 제도 마련 및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지자체 대표로 참석한 회의에서, 대통령께도 건의드렸다. 특히 융합 돌봄 특구 등 국가 시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권한과 재량을 주는게 필요하다. 경북도는 선봉에 서 직접 테스트베드가 돼, 반드시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 지금부터가 추세 반전에 진짜 출발점이다.

경북의 주요정보

구미 라면축제
문경돌리네습지
포항국제불빛축제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과 왜관철교

구미 라면축제

특별한 지역축제가 없던 도시에 산업도시라는 특징을 살려 지역기업의 협조를 받아 2022년 '구미라면캠핑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한여름의 날씨였지만, 라면이라는 이색소재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첫해임에도 15,000여 명의 방문객이 몰렸다. 첫 해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축제 명칭 및 시기 등을 변경해 2023년에는 '구미라면축제'라는 명칭으로 11월 17일에서 19일 3일간 구미역 앞 원도심에서 개최됐다. 시 자체에서도 도심에서 개최하는 최초의 축제였다. '함께라면, 구미가 땡겨'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즐길라면! 라면로드', '쉴라면! 힐링거리', '먹을라면! 테마광장', '빠질라면! 라면스테이지' 코너로 축제장을 구성해 방문객이 맞이했다. 나만의 이색라면요리 경연대회, 스트릿댄스파이터, 면랑운동회 등 다양한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청소년부터 전세대의 참여을 이끌었다. 지역의 강점을 살려 공장에서 공수된 '갓 튀긴 라면'은 축제의 한정판으로 판매했는데, 그 인기는 놀라울 정도였다. 그 결과, 11월에 이른 한파에도 불구하고, 2022년의 4배가 넘는 방문객이 방문하였고, 그 경쟁력을 인정받아 '2024~2025 경상북도 우수 지정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다.

문경돌리네습지

문경돌리네습지는 물이 고이기 힘든 돌리네 지형에 습지가 형성된 세계적으로 매우 특이한 사례로 희귀한 지질학적 가치와 육지와 초원, 습지 생태계가 공존해 팔색조, 하늘다람쥐 등 천연기념물과 수달, 담비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함한 9백여 종의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인정받아 2017년 환경부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후 훼손지 복원과 탐방로 구축 등 습지탐방이 가능하게 기반 시설을 조성하였으며 2024년 2월에는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경북 최초로"람사르습지"에 등록되는 영예를 안았다.
습지는 전문적인 생태탐방을 위한 자연환경 해설서비스 제공과 숨겨진 스탬프를 찾아 글자퍼즐을 완성하는 스탬프투어 및 나만의 포토존을 찾아 인증샷을 찍어 포스팅하는 포스팅투어 외에도 매년 문경돌리네습지 생태체험, 숲속 콘서트, 전시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입장료 및 주차장에서 탐방로까지 전동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포항국제불빛축제

포항국제불빛축제는 2004년 포항시민의 날에 쏘아올린 불꽃쇼를 계기로 시작되어, 20여년이 지난 현재는 '불과 빛의 도시' 포항에서 펼쳐지는 대표적인 문화관광축제이자 전국 3대 불꽃축제로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세계 최장 길이의 POSCO야경과 동해안풍경을 배경으로 해외 유명불꽃팀이 참가한 국제불꽃쇼가 관람객들에게 환상적인 불빛판타지를 선사한다. '2024년 포항국제불빛축제'에서는 도시의 정체성인 '불'과 '빛'의 축제콘텐츠를 강화하여 1,000대의 불꽃드론의 '불빛드론쇼'와 함께 해외 3개국(중국 · 영국 · 호주)이 참가한 국내유일 '국제불꽃경연대회' 및 국내 한화팀의 '그랜드피날레'가 큰 인기를 끌었다.
※일시 : 2024. 5. 31.(금) ~ 6. 2.(일) ※장소 : 영일대해수욕장 일원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과 왜관철교

다부동전적기념관은 6.25전쟁 당시 수도 서울이 3일만에 북한군에 함락되고 국토의 10%만 남은 위기 상황에 한미연합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55일간의 다부동 전투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전쟁 당시 최초의 전차전이었던 볼링앨리(Bowling Alley)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관 건물을 디자인했고, 야외에는 당시 전투로 숨진 영웅들의 넋을 기리고자 구국용사충혼비가 세워져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부동 전투의 영웅이었던 故 백선엽 장군의 동상과, 이승만, 트루먼 전 대통령의 동상이 건립되어 한국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던 최후의 성지로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왜관철교는 1905년 일제 강점기에 군용 단선 철도로 개통한 경부선으로 다리 길이 469m, 폭 4.5m의 트러스트 방식으로 축조된 철도교량으로 6.25전쟁 당시 철교를 폭파해 북한군의 남하를 막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다리다. 콘크리트 교각으로 화강암을 감아서 의장이 화려하고 지면에 닿는 부분을 아치장식과 붉은 벽돌로 마감하는 등 근대 철도교에서 보기 드물게 장식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한강철교와 함께 6.25전쟁 격전장의 중요한 상징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며, 다리 아래로 공원과 평화분수가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칠곡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인기 있는 곳이기도 하다.

경상북도 우수사례

따뜻한 동행도시 구미
모든 승객 공짜, 전국 최초 청송 무료버스

따뜻한 동행도시 구미

구미+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소아과 오프런, 응급실 뺑뺑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구미시는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과 함께 손잡고 365일 응급분만 및 신생아집중치료실 6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의 성장과 신생아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소한 구미+(플러스) 신생아집중치료센터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 산부인과 전문의 1명을 채용했고, 간호사 7명과 함께 총 10명으로 팀(team)을 구성했다. 구미시는 경북도내 신생아 치료 병상이 전무해 그동안 시민들이 대구지역 등 다른 지역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과 불안함을 해소하고 저출생 위기에 고위험 신생아의 생존율을 높이고자 사업을 추진했다.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미시만의 특화된 보건의료 정책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3월 1일 개소해 52명의 신생아들이 중환자실 입원치료를 받고 건강히 퇴원했으며, 응급분만도 31건을 실시했다(5.31 기준). 임산부와 아이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구미 365 소아청소년 진료센터

구미시는 저출생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순천향대학교부속 구미병원에 '365 소아청소년 진료센터'를 개소했으며, 지난 한 해 9,000여 명의 환자가 이용했다. 진료센터는 365일 24시간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상주해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하므로 구미시민에게는 든든함을, 다른 지역 부모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칠곡, 김천 등 타 지역의 방문 환자 수도 전체 이용률의 30%가 넘어 경북 서부권 응급의료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상황에서도 전문의를 6명 확보해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의견 수렴으로 의료서비스 질적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구미시아픈아이돌봄센터

아이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가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 아이가 아플 때이다. 갑자기 휴가를 내기도 어렵고 친척이 아이를 봐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난감할 수밖에 없고, 게다가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예고도 없이 아플 때가 많아 그때마다 맞벌이 부부들은 위기를 맞는다. 구미시는 2023년 10월부터 아픈아이돌봄센터를 운영 중이다. 아픈아이돌봄센터는 자녀 병원 동행이 어려운 부모를 대신해 전담돌봄사가 아동 픽업부터 진료까지 전 과정을 동행하며, 진료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놀이□학습공간, 침대 등을 갖춘 센터 내에서 간호 돌봄을 지원하고, 진료 결과는 부모에게 유선과 문자로 안내한다. 이용은 4세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등 돌봄 취약가정에서 당일 신청, 당일 이용이 가능하고, 신청방법은 '모이소'앱을 통해 신청 접수하며, 이용료는 무료이고, 병원비와 약제비는 본인 부담이다. 아픈아이 병원진료동행서비스는 일하는 엄마, 아빠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이용도와 만족도가 높다.

24시 다함께돌봄센터

구미24시 마을돌봄터는 구)비산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248㎡(75평) 규모로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로 사무실, 놀이공간, 학습공간, 수면실을 갖추고 24시까지 운영해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있다. 시는 육아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내 7개소로 24시 돌봄센터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며, 오는 9월에는 경북 도내 최대 규모의「새마을24시 돌봄문화복합센터」도 개관할 예정이다. 512㎡(155평)의 면적에 ▲실내미끄럼틀 ▲파도맵핑 ▲AR클라이밍 등 테마별 돌봄전용공간과 ▲책 숲길 ▲가상스포츠 공간 ▲1인 미디어실 ▲코딩영어 학습실 등 AI융합 체험공간으로 구성하여 문화 접근성을 융합한 수요자 맞춤형 공적 돌봄기관으로 조성한다. 구미시는「2022년 마을돌봄사업 공모전」에서 지자체(구미시), 시설(옥계중흥 마을돌봄터) 2개부문에서 동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2023년 지역사회 놀이혁신 활성화 유공」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재인증) 등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정주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모든 승객 공짜, 전국 최초 청송 무료버스

보편복지, 탄소중립, 경제활성화 1석 3조 효과

청송군은 2023년 새해 첫날부터 지방소멸 위기극복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군민은 물론 관광객 등 청송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의 관내 버스이용 전면 무료화 정책을 시행했다.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장애인, 아동 · 청소년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무료 버스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꾸준히 늘고 있다. 무료 이용자임을 증명하는 카드나 쿠폰 없이 누구나 올라탈 수 있는 버스가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청송군이 유일하다.해외에는 탄소중립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무상 대중교통정책을 시행하는 도시들이

꽤 있다. 프랑스 샤토루, 에스토니아 탈린, 룩셈부르크, 미국 워싱턴 등이 대표적이다.

무료 버스 도입의 가장 큰 이슈는 재정부담 문제다. 청송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40%를 초과하고, 전체 인구는 2만 4천여 명에 불과한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속한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전략이 필요했다. 그중 하나가 선별적 교통복지가 아닌 보편적 이동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농어촌 무료버스 도입이었다. 준공영제 정책에 따라 버스회사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매년 22억 원에 달했다. 거기에 3~4억 원을 추가하면 농어촌지역에서 전면 무상 버스 도입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코로나19로 버스 이용객이 40%나 줄고, 인구 감소로 수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버스회사 입장에서도 반겼다. 전액 예산 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요금과 관련된 부수적인 일도 사라졌다. 버스 기사들은 요금을 받고, 거스름돈을 내주는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승객들의 안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고령의 승객이 보따리까지 여러 개 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리를 잡고 요금을 내느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버스에 상존하는 위험 요소이다.

무상 버스, 여성이 주 수혜자

무상 버스는 특정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성 중립적인 정책이지만 주된 수혜자는 여성들이다. 농어촌은 교통이 불편할 뿐 아니라 환승제도도 없어 대도시에 비해 이동권에서 큰 차별을 받아왔다. 병원, 시장, 목욕탕, 미용실 등을 이용하려면 읍내까지 나가야 한다. 편의점이나 수퍼조차도 걸어서 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택배나 배달도 쉽지 않으니 물건을 사려면 직접 나가야 한다. 시골일수록 '자가용은 필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집에 차가 있어도 운전을 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농어촌 무료 버스 운행 이후 지난 3개월간 버스 이용객은 25% 정도 증가했다. 장날 같은 경우에는 만차로 운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승객 대부분이 여성이다. 청송군 농어촌 무료 버스 담당자인 남영희 주무관은 "어르신들에게 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는 사회로의 연결통로"라며 "사람들을 자주 만나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8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들은 '천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천원 택시'도 청송군이 2015년 경북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초고령지역의 새로운 활력

'농어촌버스 무료운행'을 시작 1년의 성과로 탑승인원(추정)은 약 413천여명(군인구대비 17배), 금액으로 환산하면 529백만원 상당으로 예산투입 350백만원 대비 1.5배 효과가 나타나, 보편복지 향상, 탄소중립 환경실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보이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송군은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좋으며 이동권이 증진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특히,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병원도 가고 외출을 할 수 있어 초고령지역의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 시행으로 언론 노출이 많이 되어 청송의 농특산물과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홍보 효과가 크고 관광객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소식

제12대 후반기 의장단 호국원 참배
제12대 후반기 출범식
제79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2025 최대 국제행사(APEC) 경주 유치 일냈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독도바다 정화활동으로 유종의 미 장식!

제12대 후반기 의장단 호국원 참배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제12대 후반기 도의회 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첫 일정으로 7월 8일(월) 오전 10시 국립 영천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하고 후반기 도의회 의정활동을 본격화했다. 박성만 의장을 비롯해, 배진석 부의장, 최병준 부의장, 이춘우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 영천 지역구 의원 및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 3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헌화 및 분향,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순으로 참배가 이어졌다. 국립영천호국원은 2001년 개원하여 현재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 등 총 50,155여기의 묘역이 안장되어 있으며, 호국정신 고취와 대국민 안보의식 함양을 비롯하여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아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12대 후반기 출범식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7월 5일 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제12대 후반기 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의회운영위원장 이춘우(영천1,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장 이선희(청도, 국민의힘),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권광택(안동2, 국민의힘), 문화환경위원장 이동업(포항7, 국민의힘), 농수산위원장 신효광(청송,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장 박순범(칠곡2, 국민의힘), 교육위원장 박채아(경산3,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로써 경북도의회는 지난 7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통해 박성만(영주2, 국민의힘) 의장과 배진석(경주1, 국민의힘), 최병준(경주3, 국민의힘) 부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며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했다. 본회의 종료 후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안원효 의정회장, 임도곤 농협중앙회 경북본부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제79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6월 28일 본회의장에서 상주함창초등학교 6학년 학생 30여명과 지도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제79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하였다. 이 날 제79회 청소년의회교실에는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한 학생들을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격려하였으며, 참가 학생들은 1일 도의장 및 도의원의 역할을 직접 맡아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일 도의원이 되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스스로 운영하여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 체험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도민으로서 필요한 소양과 자질 함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올해에는 의회교실 참여를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5 최대 국제행사(APEC) 경주 유치 일냈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가 경상북도 경주시로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경북도와 경주시, 260만 도민과 함께 사회단체들, 그리고 경상북도의회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배진석) 등이 모두 함께 힘을 똘똘 모아 이루어낸 성과라는 평가다. '천년 고도' 경주가 인천·제주 등 결코 만만치 않은 거대 광역단체와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던 가운데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2023년 11월 21일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도민 APEC 정상회의 유치 운동 참여 및 유치 활동 지원 등 경북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선정되는데 경상북도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해왔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업무보고 및 간담회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의 당위성과 홍보 전략, 특별위원회의 타시도 대상 유치 활동 계획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논의하였으며, 전국의 주요 광역단체와 광역의회에 경주 유치 지지를 청하고,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서울시를 비롯하여 경기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하여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당위성 설명 및 홍보를 통해 경주 유치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독도바다 정화활동으로 유종의 미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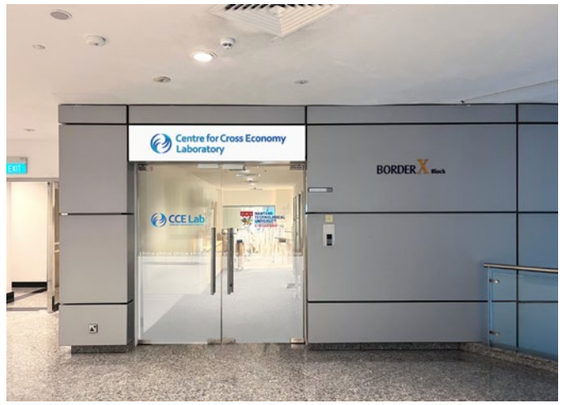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허복)는 6.12.(수)~14.(금) 3일간, 울릉도·독도 현장을 찾아 일본 역사왜곡 및 독도침탈 야욕 규탄성명 및 민·관 합동 독도 정화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장식했다. 13일 오전, 울릉도 사동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독도로 이동하여 매년 반복되는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과 독도침탈 야욕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와 함께 조용하면서도 확고한 독도수호 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독도바다 일원에 대한 정화활동을 했다. 이번 행사는 독도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민간단체인 울릉수난구조대 20여 명과 합동으로 독도 주위의 쓰레기 수거와 함께 독도 주변 바다 속에 버려져 있는 폐어구 등 폐기물 수중수거 등의 활동을 펼쳤으며, 수거된 쓰레기는 울릉도·독도 주변의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으로 건조된 171톤급 '경북0726호'를 이용하여 육지로 운반함으로써 이번 행사에 그 의의를 더했다.

글로컬 이노베이터를 찾아서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조남준 박사편
서면인터뷰

다양한 융복합적 학문 경험을 바탕으로 '변환경제(Cross Economy)'라는 새로운 경제개념을 고안하고 변환경제 개념을 기반으로 기존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서 '회복성(Resilience)'을 목표로 하는 싱가포르 난양공대 변환경제연구센터 조남준 센터장을 만나보았다. 조남준 센터장은 전 세계적으로 소멸해 가는 지방 소도시의 경제적 부흥을 위해 그 도시만의 저평가된 천연자원과 특산물을 발굴 및 활용하고, 재료혁신을 통해 '지역특화맞춤형' 고부가가치 산업 구축 전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난양공대 변환경제연구센터 설립 배경과 주요 목표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소속의 변환경제연구센터(Centre for Cross Economy Global, CCE)는 엔지니어링 전략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회복성 소재 솔루션을 개발하는 연구소이다. 공학, 화학, 물리학, 생물학, 머신러닝 및 의학 분야의 전문 지식을 통합하여 분자 수준에서의 새로운 환경 및 임상 문제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오늘의 재료로 내일을 준비하다(Preparing for tomorrow with materials today)'라는 비전 아래, 융복합적 기술을 통한 지속가능성 연구, 교육, 정책 수립을 넘어 세계 최고의 허브가 되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특히, 변환경제연구센터는 단순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 그 이상을 추구한다. 자연은 인간에게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주었음에도, 아직 그 방법을 모르거나 부가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사용법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를 막는 방법으로 재료 소재 자체의 형태 변형, 가치 창출 및 고부가가치 산업을 근간으로 한 경제 성장 배가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폐기물로 여겨졌던 자원을 고부가가치 경제자원으로 변환하여 산업과 경제의 차원을 넓히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연구센터는 세계 각지의 경제, 산업, 환경 및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창출하기 위해 설계된 혁신적인 과학기술 연구 프로젝트의 선두에 서 있다. 다양한 환경에서 시도하지 않은 도전과 기회를 탐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변혁적인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울릉도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프로젝트에서 변환경제연구센터의 역할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울릉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프로젝트'는 울릉도를 다시 살기 좋고 회복 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본 프로젝트는 보호와 발전을 통해 울릉도의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 환경을 위해 노력하며, U-City 울릉을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캠퍼스 및 글로벌 리딩 기업과 지방정부 간의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단기, 중기, 장기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외 대학과 기업의 참여를 통해 '친환경 경제 섬'으로의 탈바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교육 기반을 확충하여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하고, 매년 100만 명이 찾는 국내 대표 관광섬으로 울릉도를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경북도와 울릉군, 대학, 고등학교, 그리고 기업 간 협력이 핵심이다. 한동대와 난양공대는 울릉도에 현지 캠퍼스와 연구소를 설립하여 지역 인재의 선발과 육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울릉도의 대표 천연자원인 우산고로쇠 나무와 심층 해양수를 활용한 천연식용 식품과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화장품 재료, 약용제품 및 바이오공정용 물질 개발 사업과 해양 폐기물을 활용하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도 주력할 것이다. 변환경제연구센터는 첨단 바이오 플랫폼 기술개발 주도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확보와 경제 확장에 필수적인 전략 요소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그린 분야에서의 지역 인재 채용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될 계획이다. 한동대와 난양공대는 각각 지역 인재의 육성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 협력을 진행할 것이며, 지방정부는 교육 기반의 구축과 정주 여건 조성을 총괄하여 이를 지원할 것이다.

왜 경북의 울릉도가 프로젝트 장소로 선택되었나

울릉도는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이지만, 그동안 생업 기반인 어업 환경이 열악해지고 높아진 생활물가 등으로 의료와 문화 혜택조차 받기 어려워져 1974년 3만 명에 이르던 인구가 지금은 9,000명 정도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유일하게 인구가 1만 명이 채 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경북도가 오랜 기간 울릉도의 보호와 발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 환경의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울릉도가 세계적인 친환경 섬으로서 'Little Singapore'가 될 잠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린 아일랜드 프로젝트의 장소로 선정되었다. 특히, 울릉도는 육지와의 지정학적으로 떨어져 있어 독자적인 천혜의 자연환경이 보존됐고, 또 울릉도만의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첨단 바이오, 기능성 식품, 천연의약,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 기본 자연재료에 대한 경쟁력이 두드러진다. 여러 가지 천연자원 가운데 '자연이 선물해준 물방울'이라고 불리는 우산고로쇠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변환경제연구센터가 울릉도 프로젝트에서 Triple Helix 혁신 모델을 어떻게 활용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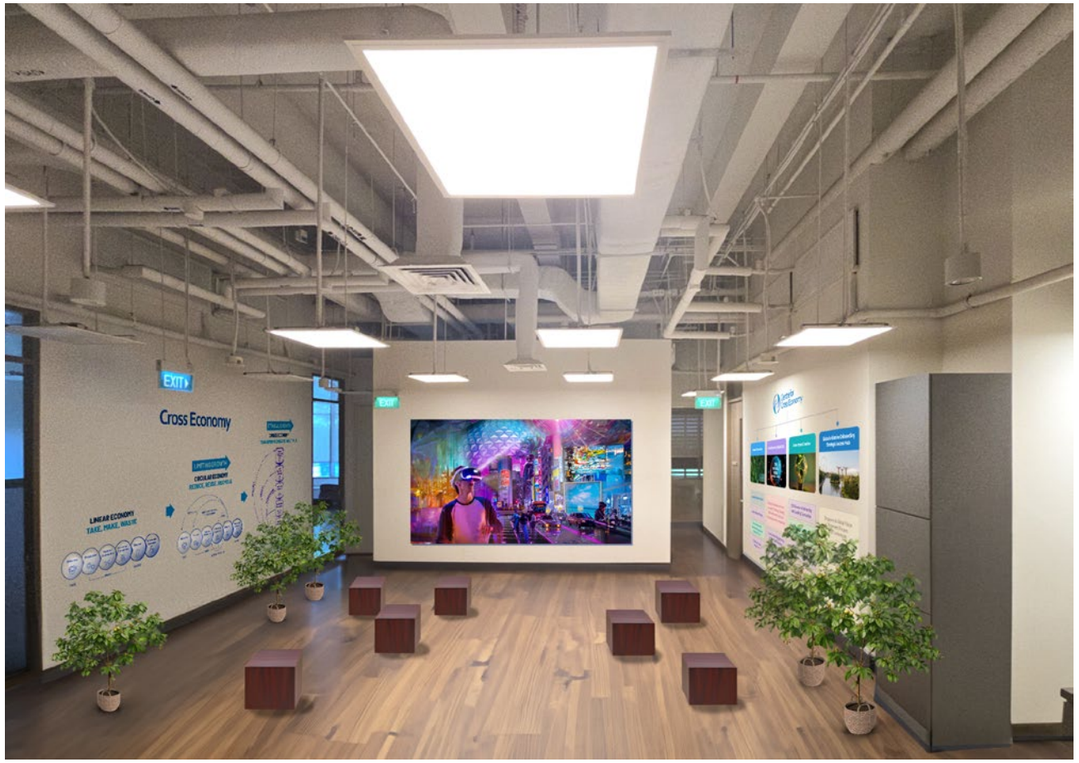
트리플 헬릭스 모델(Triple Helix: Etzkowitz, Henry & Leydesdorff, Loet, 1997)은 산업, 대학, 정부 간의 삼중 나선 구조를 통해 혁신과 지식 기반 경제를 촉진하는 이론이다. 이 모델은 지식사회에서 혁신과 경제 발전을 위해 지식의 생산, 이전, 적용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및 사회적 형태를 창출하는 데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며, 세 기관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장려한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소속 변환경제연구센터는 울릉도 프로젝트에서 트리플 헬릭스 혁신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문적 과학기술의 연구 성과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적용 및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도모하고 있다.

1. 한동대학과의 협업 : 변환경제연구센터는 한동대학과 긴밀히 협력하여 울릉도가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문적 연구와 실제 현안 해결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울릉 특산물의 첨단 바이오 과학기술 적용: 울릉도의 특산물인 우산고로쇠 나무 수액을 활용하여 메이플 시럽과 약용 성분을 추출하는 첨단 바이오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울릉도의 특산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생 기술 및 재료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3. 지역 인재 선 · 육성 및 정주 지원: 변환경제연구센터는 지역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하여 청년들이 지역 대학을 졸업한 후 지역 기업에 취업하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청년의 섬'으로 울릉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대학은 지역사회와 글로벌 그린 산업에 필요한 지역 특화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울릉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변환경제연구센터는 트리플 헬릭스 혁신 모델을 통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혁신적인 해법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울릉도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울릉도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와 경제에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울릉도에서만 자생하는 특산종인 우산고로쇠 수액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특산 제품을 사업화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신산업 구조를 확립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이는 인구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로 인해 소멸 위기에 처한 도시를 부흥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모델은 우리나라 다른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 도시에 현지 맞춤형 및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혁신적인 제품 제조 기술을 통합하여 농업, 환경 과학, 물류,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수액 채취 기술, 에너지 효율적인 증발 및 정수 기술, 친환경 제조 공정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 포장 솔루션을 제공하여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은 울릉도의 자연과 생태계를 보전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 해결에도 일조할 수 있다.

지방시대 구독자에게

보통 '혁신(革新)'이라고 하면 사람 대부분은 첨단기술을 생각합니다. 혁신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혁(革)'이라는 한자는 원래 가죽을 의미하지만, 혁신은 그 가죽을 벗겨내고 다듬어 새롭게 만드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는 단순히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작업을 의미한다. 각 상황에 맞는 혁신을 기존의 틀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오늘날 우리는 비정상이 정상이 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기존의 해법이 통하지 않은 다양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인구감소와 급감하는 산업 및 경제 성과지표는 많은 소도시들에게 심각한 소멸의 위기를 안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전에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과학기술의 적용과 실생활에서의 접목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단순히 학문 관점에서의 연구 성취를 넘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부흥을 이끌며 사회에 그 성과를 환원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에 과학기술 및 재료의 혁신이 단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인구 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소도시들이 경제적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방법은 있고 대부분이 알고 있다. 실행을 안 할 뿐, 이제는 실행할 시기이다.

정책포커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성과와 과제

정부의 의료 개혁과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

※ 지방시대 매거진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기고 내용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성과와 과제[1)]

1.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우리나라의 인구 3대 리스크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문제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감소 현상은 경제활동 인구를 감소시켜 지역경제 후퇴를 유발하며, 지역의 기초생활시설 및 서비스 수급 문제의 발생, 지방재정 기능의 약화 문제를 초래한다.

정부는 인구감소로 인해 발생 되는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운영중이며,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그 정책 중 하나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지역에 대한 기부를 촉진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부할 수 있다.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부 지역에서 생산된 각종 답례품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2.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현황 및 운영 성과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시행되었다. 시행 초반, 낮은 인지도와 저조한 모금 실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지속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약 52만 6천 건의 기부, 650억 6천만의 기부금을 모금하였다. 제도 시행 첫해 비교적 많은 기부금이 모금되면서 좋은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실적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부금이 크다 작다는 판단은 지역별 모금 현황과 실제 재정 규모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기부금의 규모를 논의하는 것을 넘어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 목적이 얼마나 잘 달성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제도의 성과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대표적인 정책 목표로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도 성과분석을 위해 지방재정확충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평균 2억 4천만 원, 비인구 감소 지역은 1억 1천만 원 지방재정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했을 때, 재정자립도 하위 20% 지방자치단체는 2억 7천만 원 증가했고, 상위 20% 지자체는 4천만 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전영준 · 유보람, 2024).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정 규모 비율을 고려하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일정 부분 재정확충 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향후 기부금 규모가 확대된다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게 될 기여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현안과 현안별 개선 방향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첫 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고향사랑기부제를 보다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

1 저자: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지원단장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다.
제도 도입 이후 학계, 언론, 행정부, 입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현안 몇 가지를 살펴보면 ①제도 규제 완화, ②법인기부 허용, ③세액공제 제도 개선, ④민간 플랫폼 허용이 있다.

1) 제도 규제 완화

고향사랑기부제의 규제 완화는 홍보 및 기부 상한액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초기「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기부금 모금 방법에 있어 개별 · 호별 모금과 사적 모임에 의한 권유 독려를 금지하며 모금 방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개별 전화, 서신, 전자 전송매체, 호별 방문, 사적 모임(향우회, 동창회 등)을 통한 홍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실질적 홍보 방법이 제한적이었다. 아울러 기부 상한액이 500만원 수준으로 다소 낮게 책정되어 기부금 규모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행정부와 입법부는「고향사랑 기부금법」개정을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법률 개정을 통해 2024년 8월부터 문자메시지, 동창회 · 향우회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가능하게 하였고, 2025년부터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부금 규모를 확대하였다.

2) 법인기부 허용

법인기부 허용은 법인의 사회공헌 인식 확산에 따라 지역의 주요 구성원인 법인을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대상에 포함하자는 취지이다. 또한 2016년 일본의 기업판 고향납세 도입이 기부금 규모를 확대하였다는 견해가 확산됨에 따라 국내 고향사랑기부제의 법인기부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인기부의 허용은 전체적인 기부금 규모의 확대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법인기부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법인 허용에 따른 제도 설계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기부금 모금 주체 및 대상을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져야 하고, 법인에게 부여할 혜택의 범위, 법인 혜택으로 인해 발생할 정부의 재정 결손분에 대한 합의, 정경유착과 같은 부작용 예방책 등 논의되어야 할 과제가 산재 되어 있다.
아직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이니만큼 개인의 기부 시스템이 안정화된 이후, 법인기부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세액공제 제도 개선

세액공제 제도 개선은 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부금 혜택을 높이고, 기부금 규모를 확대하자는 취지이다.
세액공제 제도 개선의 요구는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가장 최근 2024년 7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발의로 재논의되고 있다(한병도의원 대표발의, 2024.7.15.).
발의 내용의 요는 전액 세액공제 기부금액 기준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으로 조정하고, 5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00분의 30으로 공제율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세액공제율의 확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현황을 살펴보면 연말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 기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행정안전부, 2024), 이는 세액공제 혜택이 고향사랑 기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10만원이고, 10만원 기부 시 30% 답례품 제공이 가능하다. 최근 지방 물가가 크게 증가하면서, 답례품 주요 항목인 농축수산물 물가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물가 증가율을 고려했을 때, 3만원 수준의 답례품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방물가 증가율을 고려하여 세액공제 확대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민간 플랫폼 허용

민간 플랫폼의 허용은 찬 · 반론의 입장이 팽배한 이슈 중 하나이다. 2023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되면서 고향사랑 e음이라는 공공플랫폼이 이용되고 있다. 공공플랫폼을 통해서 기부금 모금과 홍보, 기부금 접수 및 확인, 답례품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이 수행되고 있으나 공공플랫폼의 한계점이 지적과 함께 민간 플랫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간 플랫폼의 도입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특히,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플랫폼의 허용은 지자체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다만,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관리 운영의 투명성, 지자체 간 형평성 측면에서 민간 플랫폼 도입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부금 접수 업무 수행에 있어 기부자 개인정보를 취급하여야 하는 문제, 재정력이 우수한 지자체 중심의 민간 플랫폼 활용 활성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있어 민간 플랫폼의 허용은 필요하지만, 위탁 대상 사무의 선정 기준 명확화, 위탁 대상 사무별 운영 · 관리 체계 수립, 민간 플랫폼 자격 기준 명확화 등 단계별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된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이제 1년 반이 조금 넘은 시점이지만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과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로, 한편에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관심의 표명으로 보여 질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장기간 지속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쟁점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안별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시급하지만 위험부담이 높은 현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전영준 · 유보람(2024),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정책효과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4년 수시과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고향사랑기부제 첫 해 기부액 약 650억 원 모금, 제도 시행 첫 해 성공적으로 안착 평가(2024. 1. 10.)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 ·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정부의 의료 개혁과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

정정부가 보건의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대장정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전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였고, 첨단 의료분야에서 일류 국가가 되었다. 싼 값에 쉽게 전문의를 만나고, 원하는 검사와 약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대도시에는 병 · 의원이 넘쳐나지만, 지방의 무의촌은 오히려 늘고 있다. 미용성형과 비급여 진료는 성황을 이루지만, 필수분야 의사는 부족하다. 지방의 의료공백은 지역소멸을 가속하고, 큰 도시가 아니면 출산할 곳조차 찾기 어렵다. 암 환자는 새벽부터 서울행 고속열차에 몸을 싣는다. 병의원과 대학병원이 환자를 두고 경쟁하며, 대학병원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몰려 응급 중증 환자는 제대로 치료받기 어렵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첫째, 우리나라는 근대의료가 외국의 원조와 일제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민간의료 중심인 일본의 의료제도가 이식된 결과, 공공성이 부족한 영리적 의료체계가 국가의료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둘째, 의사가 부족했다. 의사 양성은 다른 분야보다 오랜 과정이 필요하다. 영리적 의료 체계에서는 의사들끼리도 협력자가 아닌 경쟁자로 인식하게 되며, 의사수를 늘리는 정책에 저항하게 한다. 그간 의료공공성을 높이려는 대부분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주요한 이유는 의사 부족과 의사들의 집단적 저항이었다.

셋째, 사회보험으로서 전국민건강보험이 가진 한계다. 보험료 인상 자체가 어려운데다 정부 재정도 최소한의 투입에 그쳐 의료비 공적 재원 비중은 세계 최하위권에 속하게 되었다. 부족한 보장성의 틈새를 타 급성장한 민간의료보험은 과잉진료와 공모하며 경상의료비의 폭증을 가속했고, 비급여 진료를 늘리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켰다. 행위별 보상 수가체계는 과잉진료와 의료기관 간 무분별한 경쟁의 원인이 되었다.

그간 정부는 국가 보건의료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수십 년째 노력해왔다. 1998년에 김대중 정부는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고, 참여정부에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으로 구체화하였다. 2013년,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를 계기로 여야가 만장일치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고, 2016년부터 제1, 2차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세운 바 있다.

필수의료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영리적일 수 없는 필수의료 분야는 사적 이윤추구가 허용된 의료 환경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없다. 한정된 재정투입과 미약한 거버넌스로 이윤 동기를 뛰어넘어 공공적 필수의료 체계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둘째, 부족한 의사수다. 우리나라 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인 3.7명의 절반에 불과한데다 그마저 수도권 · 대도시와 비필수 분야에 몰려 있다.

셋째, 부족한 공공의료 기반이다.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기관수 5.2%, 병상 수 8.8%에 불과하여, 일본(27.6%)과 미국(21.3%)의 1/3에 불과하다. OECD 국가 평균인 기관수 55.1%, 병상 수 72%에는 비할 수조차 없다.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면 효과적인 정부 정책 시행과 보건의료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정부가 지난 2월, 「필수의료패키지」를 포함한 중요한 계획을 발표했다. 전문가 중심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우 포괄적이면서 재정계획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 중이다.

첫째가 의대 정원 학대다. 의사 양성은 10년이 넘게 걸리는 중장기 과제이므로 가장 먼저 시작하여야 한다.

둘째, 의료 이용체계의 정비다. 지난 2000년, 전국민건강보험의 안착과 더불어 시행한 지역 제한 철폐는 의료기관 간 경쟁을 부추겨 병원의 수도권 집중을 초래했다. 기관 간 역할배분과 전달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셋째, 교육 · 수련체계의 개혁이다. 의과대학이 개별 병원의 인력 공급을 넘어 지역의료를 책임질 사명감 있는 의사를 양성하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대학병원의 전문의중심병원화, 수련과정의 개선과 포괄일차의료전문의 양성 등 미래의 의사를 '병원'의 소유가 아닌 '대한민국'의 의사로 키워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넷째, 지불제도의 개혁이다.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의 확산을 막고, 진료량과 수익이 비례하는 수가보상구조를 바꾸지 않고서 세계 평균 3배 속도로 늘어나는 의료비 증가로 인한 재정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 행위량보다 치료의 결과와 진료의 가치를 기반으로 보상하는 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다섯째, 불가피한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다. 현재는 공적 보상제도가 거의 없어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진에게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의료 소송이 일본의 20배, 영국의 200배에 달하는 이유다. 필수의료가 기피분야가 된 이유 중 하나도 과도한 분쟁에 상시 노출되는 위험성 때문이다. 의사들이 소신을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특례법 제정 등 대안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안에 크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 바로 지역공공병원 강화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점이다. 전국에는 평균 100년이 넘도록 지역 주민과 함께 해 온 35개의 지방의료원이 있다. 주민 가까이에서 필수 · 적정의료를 제공하고, 재난의 선두에서 국민을 지키며, 사회적 약자의 안전망 역할은 물론 정부 정책 실행의 첨병으로서 민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의 제공은 지역 국립대병원 강화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촘촘한 필수의료 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할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그 실행을 맡아야 한다.

현재의 지방의료원은 지역공공의료의 중심역할을 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

첫째, 취약한 시설 규모다. 대부분 의료원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병원의 최소 기준인 300병상조차 되지 않는다. 이마저 인구가 적은 외곽이나 산 중턱에 위치해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적합하지 않다. 대도시 500병상, 중소도시 300병상 이상 규모로 확충하고 접근이 어려운 곳은 시민이 이용하기 편한 곳으로 이전도 검토해야 한다.

둘째, 만성적 재정난이다. 수익을 올려야 운영이 가능한 독립채산제 아래에서 병원이 공공적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필수의료, 미충족 의료, 적정진료를 수지타산을 따져가며 수행할 수는 없다. 기본예산제 도입을 비롯해 재정 운영체계의 획기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지자체의 다양성을 극복할 표준 운영지침의 수립이다. 설립과 운영의 주체인 지방단체마다 여건과 사정이 달라 지방의료원들의 통일적 운영과 사업이 어렵다. 국가 공공보건의료에 앞장서기 위한 운영표준화가 필요하며 이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병원 운영의 핵심인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공공병원의 의사 채용은 개별적 구인방식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대 설치나 지역의사제가 근본해결책이겠지만, '공공임상교수제'를 법제화하고, '시니어 의사' 활용을 활성화 하는 등 다양한 구인체계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많은 환자를 돌보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감염병이 물러간 후 원상회복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부 병원은 임금체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역공공병원의 안정적 운영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과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격차 해소에 필수적이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국민은 건강을 책임지는 믿음직한 나라를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 개혁은 시대적 과제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각오로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 반드시 이루어내길 기원한다.

신규구독 이벤트

기간 24. 08. 12 ~ 24. 08. 31
발표 24. 09. 10

지방시대 매거진 구독하고 치킨받자!

50명 맘스터치 후라이드치킨(반마리)

지방시대 매거진 신규 구독자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치킨을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1. 지방시대 매거진을 구독합니다.
(https://www.gaok.or.kr/gaok/bbs/B0000084/reqNewsLetter.do?viewType=BODY)

2 네이버폼에 구독신청 한 메일주소를 제출합니다.
(https://naver.me/xjgfErhZ)

3. 9월호 지방시대 매거진에서 당첨결과를 확인하세요.

당첨 확률을 높이는 꿀팁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블로그 이웃을 맺고
이웃 인증 시 당첨 확률 **UP!**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gaoksns

※ 블로그 이웃 인증 시
네이버 아이디를 기재해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이벤트 참여 유의사항 >

※ 1인 1회 참여 가능하며 다중 참여 적발시 안내 없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여 경품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발송이 불가합니다.
※ 경품 품절 시 동일 가격대의 다른 상품으로 안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는 당첨 발표까지 지방시대 매거진 구독을 유지해야 하며 구독을 취소 시 안내 없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편집후기

지방시대 매거진은 시·도지사의 지방시대에 대한 견해를 심도 있게 들어보고, 이를 위한 시·도의 주요 정책 및 이슈를 중점적으로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주요 법률 및 조례 등 입법 사례와 시·군·구의 우수정책을 알리고, 지방시대 정신에 걸맞게 활동하고 있는 인물을 찾아 홍보한다.
정책포커스에서는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함께하고자 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시의성 있게 제공할 예정이다.

2024년 8월호는 '경상북도' 편으로 제작되었다.
『시·도지사의 칼럼』은 이철우 지사님의 지방시대에 대한 견해를 담고,
『2024년 역점과제』로는 「저출생과의 전쟁선포」, 「저출생 해결책은 국가 구조 틀 변황」, 「경북도 저출생 극복의 테스트베드」에 대한 정책을 소개한다.
『경상북도 우수사례』에서는 「따뜻한 동행도시 구미」, 「모든 승객 공짜, 전국 최초 청송 무료버스」의 우수정책을 홍보하고,
『의회 소식』으로는 「제12대 후반기 의장단 호국원 참배」, 「제12대 후반기 출범식」, 「제79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2025 최대 국제행사(APEC)경주 유치 일냈다!」를 소개한다.
『글로컬 이노베이터를 찾아서』는 다양한 융복합적 학문 경험을 바탕으로 '변환경제(Cross Economy)'라는 새로운 경제개념을 고안하고 변환경제 개념을 기반으로 기존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서 '회복성(Resilience)'을 목표로 하는 싱가포르 난양공대 변환경제연구센터 조남준 센터장을 만나보았다.
마지막으로 『정책포커스』는 "정부의 의료 개혁과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성과와 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지방시대 매거진은 시·도지사와 시·도의 홍보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매월 특정 시·도편으로 제작하여 시·도, 국회, 중앙정부, 국민 등에게 제공된다.

2024년 9월호는 '대전광역시' 편으로 제작된다.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 Diplomacy

Decentralization of Governmental Administration

Regional Innovation and Development